부산상공회의소

보 도 자 료

【보도일시】
2023년 3월 7일(화) 14:00 이후

담당 :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
석 지 만 차장 (990-7043)

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개최

부산상의, 경기침체기에 기업 살리는 세정지원 절실!

▶ **경제침체 확대를 감안한 기업 세무조사 한시적 면제와 법인세 분납기간 연장 필요**
▶ **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및 지방벤처기업 세제혜택 확대도 요청**

부산상공회의소(회장 장인화)는 7일(화) 14시,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상공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해 연말 새로 부임한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하여 기업애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오늘 간담회는 고물가, 고금리, 수출부진 등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를 세무당국에 직접 전달하고, 세정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.

간담에 앞서 부산지방국세청은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고,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펼치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

간담시간에는 부산상의가 지역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고, 기업 자체로 경기침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내용을 담은 4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.

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, 물가상승의 본격화와 수출감소 등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된 현 상황에서 중소·중견기업의 견실한 대응을 위해 중소·중견기업 세무조사 한시적 면제와 법인세 분납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.

그리고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과 관련해서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범위를 '직전 1년간 납부'에서 '직전 3년간 납부'로 확대해 줄 것과 함께 지방기업의 활발한 창업지원 차원에서 지방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부산상의가 준비한 건의사항 외에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듯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상공인들은 당면한 세제 관련 각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.

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“요즘 같이 경제태풍이 몰아칠 때 국세청이 튼튼한 바람막이가 되어주면 많은 기업들이 한계상황에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” 면서, “기업들이 이번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면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세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” 고 요청하였다.

이에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도 “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 하고 있는 지역 상공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” 면서, “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” 는 의지를 밝혔다.

첨부 1. 행사개요 1부
2. 건의자료 1부
3. 행사사진 1부(행사 직후 송부).

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개최계획

○ (일 시) 2023. 3. 7.(화) 14:00 ~ 15:30

○ (장 소)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

○ (내 용) 국세행정 운영방향 설명 및 지역 기업 세제·세정 애로사항 건의·답변

○ (참석대상) 회장님, 상임의원,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28명

- 부산상공회의소 : 회장, 부회장, 감사, 상임의원 등 21명
- 부산지방국세청 : 청장, 실·국장, 담당관 등 7명

□ 진행 순서(안)

시 간	소요	내 용	비 고
13:50~14:00	10분	• 티타임	회장, 부회장, 청장, 국장 등
14:00~14:10	10분	• 개회 및 참석자 소개	사 회 (경제정책본부장)
14:10~14:20	10분	• 인사말씀	회장, 청장
14:20~14:30	10분	• 국세행정 운영방향 설명	국세청
14:30~14:40	10분	• 부산청 세정지원 설명	청 장
14:40~15:25	45분	• 애로사항 건의·답변 및 자유토론	
15:25~15:30	5분	• 폐회 및 단체 기념촬영	

건의자료

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

2023. 3. 7(화)

1.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
2. 법인세 분납기간 연장
3.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
4. 지방 벤처기업 세제혜택 확대

부산상공회의소

1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

❑ 건 의 과 제

○ 물가상승의 본격화와 수출을 중심으로한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된 현 상황에서 중소·중견기업의 견실한 대응을 위해 한시적 세무조사 유예 요청

▢ 현황 및 문제점

❍ 세정당국의 세무조사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조사 기간, 자료 준비 등에 있어 경영상 큰 부담이 되고 있음

▶ 중소기업은 세법 전문성이 낮아 세무조사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어 매년 세무조사 규모나 내용 등에 관심이 큼

▶ 세무조사 시 세법 해석 충돌(50.6%), 과도한 자료요구(34.9%), 장기간 조사(21.3%) 등으로 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움

* 자료출처 :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(중소기업중앙회, 2019.12)

❍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된 현 상황에서 부산의 2023년 경기전망은 악화

▶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 2023년도 경제성장률을 1.7%~2.5% 수준으로 전망하는 가운데, 지역기업 대부분(34.4%)는 1.0~1.5% 수준 예상

▶ 제조업 경기전망은 전 부문에서 지수 100 하회, 2023년 기업활동여건 악화 전망 우세

▶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62, 2023년에도 고물가·고금리를 비롯한 경기하방요인 상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 악화 전망 우세

* 자료출처 : 제조업・소매유통업 경기전망조사(부산상공회의소, 2022.12./2023.1.)

❍ 엔데믹에도 불구하고 물가급등, 금리상승, 내수경기 침체 지속으로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

2 법인세 분납기간 연장

❑ 건 의 과 제

○ 금리인상, 인플레이션 압력 등 복합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법인세 분납기간 한시적 연장 건의

□ 현 황

❍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이내 분납가능

▶ 중소기업 2개월, 일반기업 1개월

□ 문제점

❍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자금상의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법인세 체납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부지원금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,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고용창출을 위해 법인세 장기분납제도 마련 필요함

▶ 중소기업(2개월→6개월), 일반기업(1개월→2개월)

3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

❑ 건 의 사 항

○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범위 확대 : 직전 1년간 납부 → 직전 3년간 납부

❑ 현황 및 문제점

❍ 경영 악화 등에 따라 세무 상 결손이 발생할 경우, 결손금에 대해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, 중소기업에 한해 이전에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

▶ 특히 결손금 소급공제는 전년에 납부한 세액환급을 통해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기안정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

❍ 중소기업은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 기간에 따른 손익의 편차가 매우 크고, 투자 및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결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장하는 기업에게 동 제도는 반드시 필요함

❍ 그러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범위가 직전 1년간의 납부액으로만 한정

▶ 경영난으로 결손이 발생한 기업은 직전 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액은 크지 않을 것이며,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성실하게 납부해 온 세금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급범위 확대 필요

▶ 또한,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미국(2년), 영국(3년)*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이 짧은 상황

* 조세의 이해와 쟁점II(국회예산정책처, '14)

4 지방 벤처기업 세제혜택 확대

❑ 건 의 과 제

○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산업에 특화된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확대 필요

▢ 현 황

❍ 벤처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

▶ 벤처기업 인증 취득일로부터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해 총 5년 간 법인세 및 소득세 50% 감면

▢ 문제점

❍ 수도권 중심의 벤처 투자 및 인프라 형성, 인력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

▶ 수도권 3개 시·도(서울, 인천, 경기)의 벤처기업 수는 2011년 12월 말 14,837개에서 2021년 6월 말 23,252개로 56.7%(8,415개)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14개 시·도의 벤처기업 수는 11,311개에서 14,941개로 32.1%(3,630개) 늘어나는데 그침

▶ 2020년 기준 창업투자회사의 90%(149개 사), 액셀리레이티의 59%(168명)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,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5년간 벤처투자 전문인력의 88%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창업 인프라 및 전문 인력의 수도권 쏠림은 심각한 수준

▶ 벤처 지원을 위해 정부 재정으로 만든 출자액 6조 247억원 규모의 '모태펀드' 역시 지방계정 비중은 연평균 3.2% 수준에 불과

▢ 개선방안

❍ 비수도권의 민간자본 유치 확대 및 지역 내 창업 인프라 구축 활성화를 위해 지역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율 확대

▶ 5년간 법인세·소득세 감면율 50% → 100% 확대